

KIEP 한중경제 포럼

KIEP Korea-China Economic Forum

제03-07 / 2003년 7월 31일

정상회담 이후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리밍싱(李明星)

중국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연구중심 국제부 부장

I. 발표요지

1. 중국측 시각에서 본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

□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는 ‘전면적 협력관계’에서 보다 진일보한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됨.

- 그러나, 이는 전략적 파트너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관계로, 안보 및 군사협력 등 보다 긴밀한 관계로의 발전은 아직 요원한 상태임.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의 비핵화 지지 및 대화를 통한 북한

* KIEP 북경사무소에서는 중국경제 현안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심층 파악하고, 정책 입안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중국 관리 및 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한중경제포럼>을 운영, 매월 정기 세미나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에서는 유관부처의 고위관리 및 전문가가 주제발표자로 참석하며, 한국측에서는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부문 인사, 한국경제단체 및 기업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해 인식을 같이함.

-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 안정 및 번영에도 기여한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봄.

□ 양국 정상은 기존의 경제·무역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직시하며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향후 양국간 경제·무역 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한 양호한 기초를 마련함.

○ 또한, 표준화 제정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심화시킴.

□ 한국의 적극적인 제안과 중국의 긍정적인 회답 형태로 이루어진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는 향후 진행될 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마무리 됨.

- 다만, 동 사항은 중국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 부분으로, 실질적인 이행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는 지역협력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임.

- 현재 한·중·일 3국은 모두 ASEAN과 개별적으로 '10+1'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협력구도가 실현될 경우 한국과 일본의 투자가 중국보다는 동남아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중국으로서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며, 이는 또한 향후 3국간의 협력을 보다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 한·중·일 3국간 지역협력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요인은 일본의 과거사 청산 문제임.

- 한편, 미국은 자국이 배제된 동북아 지역협력체 형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 위협론'을 부각시키며, APEC을 통한 지역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공동성명 발표를 비롯하여 금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대

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과대 평가 내지 확대 해석은 곤란함.

- 공동성명에 포함된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는바, 향후 실질적인 이행과정에서의 난관, 특히 동북아협력체 구상 등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임을 인식해야 함.
- o 금번 정상회담에서는 원칙적인 사항만을 언급했을 뿐이며, 실질적인 협력방안은 향후 열릴 장관급 또는 실무자급 회의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2. 한·중 경제관계의 변화와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

가. 최근의 변화 추이 및 특징

□ 1993년 수교 이후 양국간 무역·투자관계는 빠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음.

- 한·중 무역은 수교 이후 연평균 20% 정도의 속도로 꾸준히 증가해왔는바, 1990년 28억 달러, 1995년 165억 달러, 2000년 312억 달러, 2002년 411억 달러의 무역액을 기록함.
- 투자부문의 증가추세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1993년 2.64억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對中투자액이 2002년 8.86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에서 37%를 차지하고 있음.
- o 한국의 對中투자는 현재 6위를 기록하고 있는바, 이는 프랑스의 對中투자의 2배이며 영국의 그것보다도 큰 규모임.
- o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들이 한·중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는바, 특히 삼성의 투자규모는 전체 對中투자의 20%에 달함.

□ 對中 투자의 방식, 대상지역 등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남.

- 초기의 底기술·底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
- o 초기 동부연해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 점차 확대
- o 초기 가공무역 형태에서 벗어나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현재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는 투자방식을 실시

나. 중국경제의 발전단계와 대외경제전략 변화

□ 최근 중국경제는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음.

- 정치·경제적인 안정과 외국인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속에 세계자본의 주요 투자 대상지로 성장함.
- o 초보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개혁·발전 과정을 통해 당면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
- o 산업구조 합리화와 함께 대형 다국적기업의 M&A 및 기업간 전략적 제휴 등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음.
- o 주민생활수준의 향상, 소비구조 합리화, 도시화전략 추진,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제고됨.
- o GDP 10조 元 초과, 에너지 및 교통난 완화, 시장 안정,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으로 물질적·기술적인 기반을 구축함.
- o 科教興國전략에 따른 양질의 풍부한 인적자원 및 기술 확보, GDP의 80%에 해당하는 도·농 주민 예금규모와 외국인투자 급증으로 풍부한 자본을 확보함.

□ 중국은 현재 전면적인 小康社會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구조 합리화와 효율 및 이익 제고를 통해 2020년까지 2000년 GDP의 4배를 달성함으로써 전체 국력과 국제경쟁력을 현저히 강화시킬 계획임.

- 이를 위해 기본적인 공업화를 실현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를 더욱 활성화하며 개방적인 경제체제 건설을 완성할 예정임.

- 사회주의 법제를 더욱 완비하여 ‘依法治國’의 기본방침을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현대적인 국민교육체계, 과학기술·문화혁신체계, 전국민 건강·의료·위생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능력 강화, 생태환경의 개선, 자원의 이용효율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임.
- 한편,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공산당이 표방하는 ‘三個代表論²⁾’은 공산당이 생산력, 생산관계, 과학기술 발전 등 요소의 함수관계를 두루 감안하고 “시대와 동행”하는 당으로서 변증법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함.
- 자오쯔양(趙紫陽) 시대에는 “결핍경제”하에서 공급부족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임금도 소폭 상승에 그침으로써 정치적 혼란을 유발하여 6·4 사건이 발발했는데, 이는 각 요소간의 조화가 중국의 번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임.
- 따라서, 서구의 시각으로 중국공산당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부 메커니즘을 통해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우량화되어 노동자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표-1> 중국 사회의 기본 틀

조직명	지위·역할	최고권력기관	상설기구
중국공산당	정치 총괄	전국대표대회(16大 : 2,134명)	중앙위원회(198명 +158 명)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기관	전국회의(10届 : 2,984명)	상무위원회(159명)
인민정부	행정기관	국무회의(총 79개 기관 총괄)*	국무원
전국정치협상회의	정책 건의	전국위원회(10届)	상무위원회(299명)

주 : * 국무원은 28개 정부부처+12개 위원회+1개 국유자산관리위원회+18개 독립적인 局(통계국 등)+6개 국무원 직속 사무국(홍콩·마카오 事務辦公室 등)+14개 사업단위(중국과학원, 사회과학원 등) 등 총 79개 기관으로 구성됨.

- 이에 중국정부는 ‘고신기술산업과 전통산업’, ‘도시경제와 농촌경제’, ‘동부

2) ‘三個代表’는 ▶공산당이 선진생산력의 기본방향을 대표, ▶공산당이 선진문화를 대표, ▶공산당이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경제와 중서부경제’ 등 복합적인 발전을 실현하고, ‘국내개혁과 대외개방’, ‘정보화와 공업화’, ‘현재의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3개 항목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각종 행정체제개혁과 정부기능 변화, 재정·조세체제개혁과 투·융자 체제개혁 심화, 시장메커니즘 완비 등 체제개혁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o 취업과 분배제도 및 사회보장체제를 완비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확보함.
- o 政·企 분리, 국유자산관리체제 완비, 전략적 구조조정 촉진 등 국유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o 금융체제개혁을 위해 ‘은행감독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리 및 환율의 시장화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융시장개방 수준을 제고함.
- o 대외경제·무역체제 개혁에 있어서는 개방형 경제를 통한 체제경쟁력 제고와 대외무역 유통체제 완비,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자유치 제고, 외환관리체제 완비를 통한 대외개방 수준 제고, 해외진출전략을 통한 국제화경영 확대 등을 이룩함.

-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해 科教興國전략의 이행, 국가혁신 체계 완비, 광범위한 산·학·연 협동연구와 다국적기업의 활용 등 과학연구체제 혁신, 인재 육성,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산업구조 합리화를 도모함.

□ 21세기 중국경제는 개혁·발전·안정의 유기적인 조정을 통해 지속적인 체제혁신과 시장경제체제를 이룩하고 개방형 경제운영 방식을 실현할 것임.

- 특히 개방형 경쟁메커니즘은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촉진하고 국제분업 시스템을 강화할 것임.
- o 시장경제체제는 산업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국제적인 기업간 협력과 중소기업의 발전 등으로 양호한 기업환경을 조성할 것임.
- o 도·농 경제간의 구조적 모순이 완화되고 지역경제는 조화로운 발전을 이

특할 것임.

- 공급과 수요 요인에 따른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
- o 공급요인으로는 자본규모의 확대와 효율적인 배치, 인력자원 개발 가속화와 노동력 수요주체의 다원화, 연구개발과 다국적기업의 활용에 의한 과학기술 제고 등이 있음.
- o 수요요인으로는 왕성한 소비수요 증가세 유지, 지속적인 투자 주체 확대와 외국기업의 M&A 확대, 대외무역구조 개선과 대외무역 발전에 있어서 외자기업의 지속적인 기여 등을 들 수 있음.

3. 한국 및 한·중 경제발전을 위한 제언

- ☐ 한국은 미·일·중·러 등 4대 강국 사이에서 정치·외교적 중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아시아경제권의 한 축으로서 거듭나며, 동·서양 문화의 교량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 이를 위해 한국은 한반도 통일문제의 주체로서의 위상 제고,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당의 건설과 육성, 현실적인 성과를 위한 내실 있는 정치·외교적 노력, 實事求是의 체제 창출, 부정부패 척결 등과 같은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노력해야 함.
-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주변 4강에게 부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위상 제고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現 분단 상황하에서는 자국의 안보를 타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음.
-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조직동원 능력과 선전능력이 제고된 올바른 정당의 건설 및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對中 교류·협력에 있어서 한·일간을 비교해볼 때, 한-중간 교류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중-일간 교류보다 많으나, 실질적인 성과면에서는 일본이 상

당히 앞서고 있음.

- 일본은 민간기구인 사사카와 재단과 그 기금을 통해 중국내 핵심인사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인맥을 형성하며 핵심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의명분만을 중시할 뿐 현실적 성과는 미미함.

- 한국은 비교우위를 갖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함으로써 체제상의 우위를 확보해야 할 것임.

- 동북아 지역경제에 있어서, 일본의 GDP는 중국의 4.5배, 한국의 10배에 이르며, 중국은 2003년 6월 현재 외환보유고가 3,465억 달러에 달하는 등 중·일 모두 한국의 경제상황을 앞서고 있음.

- 건전한 기업문화의 정립이 필요한바, 외국기업이 한국 기업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對韓투자 자체를 꺼릴 수 있기 때문임.

□ 한편, 한국의 對中 경영전략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제조업기지로 하는 세계경영 전략을 전개해야 할 것임.

- 또한, 세계경영자원의 최적화된 조합을 실현하여 중국이 지니고 있는 비교우위를 충분히 향유하고, 전략적으로 투자구조 합리화를 꾀함으로써 중국경제의 ‘복합적인 발전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한·중간의 일부 무역마찰에 대해서는 국가적 관점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농산물 부문의 경우, 한국은 중국의 농산물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농민 이익을 보호하려 하지 말고, 농업구조조정과 농업 경영의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함.

- 현재 연간 10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의 對韓 무역적자를 놓고 볼 때, 한국의 수입제한 조치는 더욱 큰 무역마찰로 비화될 수 있음.

- 기업들도 중국에서 모든 분야에 뛰어들기보다는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특화된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적극적인 M&A 등을 통해 對中 투자의 확대·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중국의 산업 및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략이 필요함.
- 중국은 원시적 경작방식에서 IT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 산업박물관인 동시에 1인당 GDP 10,000 달러가 넘는 1억 명의 고소득층에서 600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당수 주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층을 보유한 소비박물관이기도 함.

II. 토론 요지

問 : 한·중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한국기업의 서부개발 사업 진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 중국정부는 향후 서부지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에게 세제, 금융 등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혜택의 부여 또는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답 : 현재 지역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서부대개발 사업에 진출하는 외자기업들에 대한 혜택은 WTO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 다만, 향후 개최될 예정인 한·중간의 연도별 회의나 실무회의를 통해 동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한국기업이 선도적으로 서부지역에 진출할 경우, 동 지역 시장 선점의 기회가 될 것임.

問 : 한국은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對中투자 확대와 같은 무역외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을 강조한 바 있는데,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투자 재개 등 향후 중국의 對韓 투자계획은?

답 : 지난해 개최된 16차 당대회에서 ‘走出去’ 전략이 제시되었으나, 아직까지 엄격한 외환관리체제로 인해 해외투자가 다소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비교우위가 있고 신뢰성 있는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바, 중국기업의 對韓투자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은 향후 상당 부분 제거될 것으로 보임. 한편, 중국으로의 공장이전 등으로 한국내에서는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100억 元 이상의 무역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아직까지도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이 가능한 한국기업이 많음을 알 수 있음. 또한, 무역역조와 달리 투자역조 현상을 개선해야할 이유는 없는바, 이는 오히려 투자환경 개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봄.

問 :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쉽보다 하위단계의 개념으로 설명하였으나, 양자는 상·하위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答 :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와 전략적 파트너쉽은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임. 현재 북-중간에는 전략적 파트너쉽이 설정되어 있어, 북한이 타국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을 경우 중국은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어 있음. 반면,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는 군사적 개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다만, 중국은 북-중관계에 포함된 전쟁발발시 군사적 협력 조항을 향후 제외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

問 : 중국은 어떤 측면에서 한국을 경제적 파트너로 생각하는가? 중국경제 발전에 있어서 한국이 갖는 의미는?

答 : 솔직히 말해 현재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으로부터 특별히 바라는 것도, 아쉬울 것도 없음. 오히려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미·일과 중국간의 협상에서 중간자적인 조정 역할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음. 다만, 경제적 측면의 경우, 중국은 한국을 미국 등 기술수준이 높은 제3세계와의 협상에서 하나의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음. 예를 들어, 이동통신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쉘컴 등과의 협상에서 CDMA 기술이전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한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을 강조함으로써

써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도 함. 한편, 한국기업이 특수한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가 있는바, 예컨대 통신보안 분야에서 중국시장에 접근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問 :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의 어떤 부문에 접근해야 하나?

答 : 중국은 현재 국유기업의 경영관리, 기술지원 등의 측면에서 한국기업이 참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 이를 통해 실업률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새로운 체제 및 기술 창출이 가능하다고 봄. 또한, 과학기술부문과 금융시스템 등에서 한국이 공헌해주길 희망하고 있음. 현재 국유기업의 공장가동률은 평균 30% 미만으로 중복투자와 과잉투자를 극복하기 위해 국유기업에 대한 M&A 등 한국기업의 다양한 참여를 희망함.

問 : 한국기업들을 포함한 외국기업이 실제로 국유기업 개편에 참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중국정부는 금년 전인대에서 국자위 신설을 승인, 국유기업의 재산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개혁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방침을 표방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 및 시행세칙 제정, 지방기구 설립 등 세부적인 작업 추진이 아직 부진한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한 진전 상황은?

答 : 종래 국유자산 관리 및 평가작업이 부진한 데는 부처간 이해의 상충도 한 몫 하였음. 경제무역위원회는 시장가격에 의한 산출을 주장한 반면, 노동부는 장부가격을 유지하면서 자산유실 없이 노동자 정리해고를 줄이는 데 치중하는 등 부처간 갈등이 심각하였음. 이에 제16차 당대회에서 국무원 산하에 국유자산관리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5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국유자산 관련 업무를 통합함. 또한, 각 성별로 국유자산관리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유자산 소유권 중 상당부분을 각 省에 이양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고, 省간 경쟁을 통해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임. 그러나 중국정부는 국유자산관리의 중점을 개혁에 둘 것인가, 혹은 안정에 둘 것인가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때문에

현재 국유자산관리 문제는 법규 제정 단계로 진전되지 못하고 국무원 조례로 남아 있음. 요컨대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매각도 불가능한 상태임. 다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금후 국유기업의 효율개선을 위한 다양한 혁신조치들이 시행될 것인바, 국자위에서 선정한 190여개 대형 국유기업의 최고경영자직에 외국인을 포함한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임. 작년에 이미 중국증권감독위는 홍콩에서 차관급 인사를 영입한 바 있으며, 대형 국유기업 중에서도 일본인이 대표직을 맡고 있는 기업이 있음(***).